

#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폐지 움직임 반발

공정위, 도에 개선 권고

도 건설업체 투쟁 예고

“공사 수주 감소 불보듯”

정부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제정된 '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' 폐지를 본격화 해 강원도내 건설업체가 대정부 투쟁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역

중소업체간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 134건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강원도 등 전국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.

권고 대상은 △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△LED조명 보급촉진 조례 △제주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다.

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다.

이 조례가 폐지되면 도내 건설업체들은 '공사 수주 감소'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

이다. 도는 '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'를 제정, 각 공사에 대해 공구분할과 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규정,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.

또 공사의 시공품질에 문제가 없는 한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했다.

이에 따라 공동도급은 49% 이상, 하도급은 50% 이상으로 규정해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. 18개 시군도 강원도와 유

사한 조례를 제정, 최소한의 지역업체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.

하지만 관련 조폐가 완전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도내 건설업체들은 수도권은 물론 타 시도 건설업체와의 공사 수주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.

도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강력 반발, 이달 중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.

정동기 건설협회 도회장은 "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 폐지는 경쟁력이 약한 도내 건설사들을 고사시킬 것"이라며 "성명서와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관련 정책의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"고 반발했다.

강원도 관계자는 "행정기관에서는 정부 권고안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"이라며 "도내 건설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"고 말했다.

안은복 rio@kado.net